

“적폐 청산” vs “포퓰리즘”...여야 기싸움

국회 2016 결산심사
민주·국민의당·정의당
국정교과서·창조경제 타깃
한국당·바른정당
안보·복지정책 비판 주력

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개별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해 2016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가장 먼저 결산 심사에 들어간 국회 국방위원회는 소위원회 열고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2016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전체를 들여다 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씬씀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도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철저히 검증해 두 번 다시 국가 예산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이 주목한 적폐청산으로는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과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 예산, 박근혜 정부 5년간 이어졌던 새마을 ODA(공적외조) 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청와대 예산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결산안 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집행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 청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결산에 임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분주 정부부처 2016 회계연도 결산이 시작된 21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앞 복도가 결산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은 공무원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적폐예산의 실태와 폐해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규율을 바로 잡겠다. 두 번 다시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국회의 삭감,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을 무시한 집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요구와 관계자 문책,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에 들어간 예산과 블랙리스트 관련 예산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앞서 결산 심사 5대 원칙을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 국정농단, 특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결산 검증을 통해 적폐청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당이 주요 적폐예산으로 지목한 사업은 국정역사교과서 사업, 화해지유재단 사업, 새마을 ODA사업 및 문화창조사업, 기업형현대주택인 뉴스테이션사업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기금 융자이율 특혜 등이다.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방어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국정농단 공세를 정치공세로 규정, 적극 차단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뒤 결산국회에서 이를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년 결산국회에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던 만큼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공세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도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친다는 계획이다. 바른

정당은 결산심사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현안은 더 중요하다는 기조에 탈원전 정책과 대북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8월 결산심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살피 방침이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커넥션이 권력을 사유화해 정부 각 부처 예산을 전용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재판에서 드러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문제를 대표적 예산 사유화 사례로 지적하면서 적폐 예산 확인과 재발방지에 당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민주 ‘정발위’ 내홍

秋, 공천 룰 변경 제시...시·도당 위원장 “당헌·당규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발(發) 혁신 파동이 확산될 전망이다.

추미애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상대로 정당발전위원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전문(전문)인사와 시도당 위원장이 조 직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추 대표는 21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혁신안은 중앙당의 패권을 개선하려고 만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앙당의 패권을 시·도당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며 “김상곤 혁신안은 최고위에서 수정의결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바이블(성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김상곤) 혁신안

은 1년 전인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도 적용 못했다”며 “중앙당이 시도당의 권력을 회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고민해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에 참석, “정당에도 고쳐야 할 것은 한시바빠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 정치 역시 명망가 정치, 계파정치에서 탈피해 지방의회에서 실력을 쌓은 인재들이 헌법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당발전위 논의 대상에 공천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전문 인사들과 시·도당 위원장들은 지방선거 공천 문제는 현재 당헌·당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도당 위원장들은 지난 18일 만나 “지방선거 1년 전에 공천 규정을 확정하도록 한 당헌에 따라 선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박법계(대전시당 위원장)·박남준(인천시당 위원장) 최고위원이 이런 입장을 추 대표 측에 전달하는 뜻”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누굴 뽑을까... 고민 깊은 호남 표심

국민의당 전대, 지방의원들 내년 지방선거 연계 고심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와 전남지역 지방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지지후보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지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최대 기반인 호남에서도 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당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대표경선 출마가 당 지지율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놓고 당원 간 전망이 엇갈리면서 선택은 더욱 복잡해졌다. 내년 선거에서 살아남으려면 당내 공천 통과를 물론 본선에서도 상대 당을 물리치는 데 힘을 보태 줄 당 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내 실질적 토대인 광주·전남 지방정치 최전선에서 있는 국민의당 소속 시·도의원들은 그 고민이 누구보다도 깊다. 광주시의회의는 전체 22명 중 국민의당 소속은 9명, 전남도의회의는 57명 중 25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국민의당 지지도가 호남에서조차 10%대까지 추락하자 내년 지방선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원내대표를 맡은 김민중(광산4) 의원은 “누가 뭐라 해도 1

순위 고민은 ‘당을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하는 것이다”며 “당 대표야 당원들이 뽑으니 그 결정에 따르면 되지만 당에 대한 바다 민심이 너무 나빠 걱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선거를 책임져야 할 당 대표를 잘못 선별할 경우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의원은 “현장에선 ‘누가 돼도 마찬가지로 당을 차라리 깨자’는 말도 나온다”며 “이번 선 택이 국민의당 소속 지방 정치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전남도의회도 마찬가지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당 대표 당원 간 전망이 엇갈리지만 특출한 지지세를 보이는 후보는 없어 결국 결선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남도의회 이충식(장흥 1) 의원은 “현재 당 대표 후보 중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전을 제시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 새 지도부를 오는 27일 선출한다. 당대표 경선에는 안철수 전 대표, 이연주 의원, 정동영 의원, 전정배 전 대표(기호순)가 출마했다. /최권일·오광록 기자 cki@

“참~힘드네” 김이수 표결 이번엔 ‘이유정 변수’

야 “이유정 지명 철회 연계”
법사위, 28일 청문회 개최키로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정례 회동에서도 핵심 쟁점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여당은 21일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회동에서 오는 31일 김 후보자 임명안 표결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길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더 미룰 수 없다”며 “이날 31일에는 표결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야권 일부에서 김 후보자 인준 문제와 이 후보자 지명철회와 연계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헌재소장 문제는 다른 것과 연계해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언급 대신 이 후보자의 정치종립성 논란을 거론하면서 “지금 국회의 어려움은 인사정문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국회에 보내 파행을 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과 연계 문제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를 겨냥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이 재판관이 되면 현재가 정치적 기구가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회동은 합의사항 없이 종료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일 등을 지적하면서 청문회 개최를 거부해왔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입장 표현에 대해 “당시 공직자가 아닌 변호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형호기자 khh@

지난 20년간 1만2천명이 수강한 명강의

부동산컨설팅과 실전경매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문)

전남대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평생교육공로 교육부 장관상 수상, KBC-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건설부 장관과 새마을 토론회 참여,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특강

지난 34년간 터득한 부동산컨설팅과 실전경매 노하우를 전수하며 자격 취득 희망자, 국가공인부동산개발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관리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후 평생지도 합니다. (공무원, 교직원, 학생 할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정확하게 알아보고 성공전략강의”

장소	조선대 평생교육원 ☎ 230-7700	남부대 평생교육원 ☎ 970-0080	전남대 평생교육원 ☎ 530-3873~4
일시	매주(화요일) 주간: 3시~5시 야간: 7시~9시	매주(수요일) 야간: 7시~9시	매주(목요일) 야간: 7시~9시
수강료	20만원	20만원	20만원

부동산강의 및 컨설팅상담 010-5613-1808(정영수박사)

한마음 공인중개사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점, 삼거리 코너(뒷집 작업중), 매매 4억3천만원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무등산 총장사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임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옆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정상 금매, 매매가 7억(조정가)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 특전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公認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5기)	광주교육대학교(16기)
개강일시	·화요일 오전반: 2017. 9. 5.(화) 09:10 (초급반) ·화요일 오후반: 2017. 9. 8.(금)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7. 9. 9.(토) 09:10 (특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7. 9. 7.(목) 09:10 (중급반) ·금요일 오전반: 2017. 9. 8.(금) 09: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7. 9. 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8. 1(화)~9. 9.(토)	2017. 8. 1(화)~9. 9.(토)
수업기간	2017. 9. 5.(화)~2018.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9. 7.(목)~2018.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8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8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원 김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목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시범취득기회 부여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원 김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목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시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